

을사조약 옹호·주식파킹 의혹 등… 험난한 인사청문회 예고

尹대통령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與 “국정 동력 확보에 도움될 것” 野 “꼬리자르기 등 퇴행적 인사”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들의 임명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퇴행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흥분도 흥상 철거,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신원식 후보자는 중장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의 초동수사에 따라 경찰에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의 이첩을 결재했으나, 이를 되돌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신 후보자로 교체 시도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정부를 규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한제국 말기 일제가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협정인 ‘을사조약

을 체결한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한,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비롯해 각종 막말을 쏟아낸 바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특히나 35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수할 적임자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김행 후보자는 새만금 스카우트 잠버리 대회 졸속 운영 문제가 불거진 후 물러나게 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후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지난해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지난 14일 입장을 밝혔다. 그 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낙태 관련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신탁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겼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해명을 요구 받고 있다.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김 후보자

는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 배우자가 자신의 소셜뉴스 주식 2만2000주를 ‘죽마고우’ 친구에게 3억8500만원에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산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주식을 친구에게 맡겨뒀던 것”이라며 “결국, ‘폼주 주식파킹’으로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한 후보를 인사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김행 후보자의 천박한 욕심과 허접한 변명을 참고 들어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처음인 신 후보자와 김 후보자와 달리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의혹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예술계 좌파적결을 내세우며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서 야당과 예술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줄줄이 사퇴·반란표 색출…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여파

이 대표, 단식 중단하고 법원 출석 구속 결정 시 대표 리더십 공백 지적 기각될 경우 계파 간 갈등 깊어질 것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는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증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줬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고,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

협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민주당에 끼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

으면서 또 한편으론 민주당의 내용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소수의 비이재명계의 주도로 진행돼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이더라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이미 사퇴했다. 비이재명계로 최고위에 합류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23일 사퇴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박태홍 기자

“野, 사법리스크 족쇄풀려… 與, 이제 무엇으로 때릴 건가”

적대적 공생관계 존재감 미약해져

국민의힘이 그토록 바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도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년 간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상대당의 대선급 후보였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까지 국회 경험 한 번 없는 이 대표였으나,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구축했다.

적대적 공생관계란 타협과 설득으로

야당 정치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의 실적을 혈투하며 본인의 지지층만을 강화해 결국에는 정치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그때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이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져 나왔고 지난 2월에는 비회기 중에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맞서 임시회를 열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약해질수록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듭해오던 국민의힘의 존재감도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비윤계 대표주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 국민의힘에겐 위기라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에 민주당을 때리면 됐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가 당 대표 때문에 짊어 못하는 당이기 때문”이었다고 평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억눌러 왔던 방탄의 늪,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부터 족쇄가 풀린 것”이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40%대 진입

CBS노컷뉴스, 1017명 대상 여론조사 ‘잘못하고 있다’ 57.4%… 3%p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정운영 지지도가 6주만에 4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7명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RDD)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대비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4%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20일부터 22일까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시기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설득하고 주요국과 교역 확대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개발·디지털·기후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무기 거래 의혹이 있는 북극 정상회담을 규탄하면서 세계 각국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태홍 기자